

기고

올해 국내 전기차 공급량, 5만대로 늘려야

이제 시작인데 벌써 물량이 동이 났다. 바로 전기차 이야기다. 올해 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예산확보 대수는 약 2만대 수준이다. 그러나 1월 전에 벌써 2만대의 예약고를 올리면서 올해 확보된 전기차 예산이 동이 났다. 이는 이미 예고된 수치였다. 작년 보급된 전기차 물량 1만 4000대의 예산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전기차의 돌풍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말 올해 예산이 정해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예상 전기차 대수를 확인한 결과 5만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전기차 신청 지자체 수는 약 30군데이었으나 올해는 100군데로 늘어났다. 따라서 예상 보조금을 크게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이미 예정되었던 문제라는 뜻이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아 한다. 추경 예산 등을 활용해 후반부에 더욱 전기차 보급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폭발적인 인기를 확대시키는 계기를 확실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현 시점에서 보조금이 없으면 인큐베이터 역할의 전기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길 바란다.

둘째로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감소는 당연히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도 줄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만큼 급격하게 줄이지 말라는 것이다. 소비자가 느끼는 인센티브 중 보조금을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만큼 줄이기는 하나 속도를 높이지는 말자. 우리 한국형 전기차

보급모델 고수를 통해 더욱 전기차 시대로 돌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셋째로 올해 시작한 초소형 1~2인승 전기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경우 578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시작한 만큼 일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줄이지 말아야 한다. 작년 말 김동연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최소 400만 원을 유지한다고 약속한 만큼 확실한 확보는 필수 요소다. 중소기업형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벌써 시작을 알리고 있고 역시 인기를 끌고 있다.

넷째로 전기자동차의 흐름을 이어주기 위한 후속 조치도 확실히 필요하다. 공공용 민간용 구분 없는 충전기 관리 비용 예산 책정과 실시간적인 관리, 다양한 충전기 타입에 따른 전기차 운전자를 위한 충전기 안내 내비와 통합 컨트롤 센터 구축, 도심지의 약 70%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고려한 공용 주차장 충전기 시스템 구축, 전기차 애프터마켓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양성 등 할 일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전기를 위한 움직임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시장보다 한 걸음 앞선 전략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전기차에서 찾았으면 한다.

LOCAL 단상

‘설야(雪夜)’와 ‘와사등(瓦斯燈)’

“지금이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최악은 아니다” <세익스피어>

60년대에도 취업난은 마찬가지였다. 필자와 같이 문과대학(그때는 문리대라고 불렀다) 출신들은 아예 이력서조차 낼 데가 없었다. 수출입국(立國)이다 개발드라이브다 해서 상경계열, 이공계 출신의 인기가 대단했다. 이른바 ‘펜 대 잡는 일자리’도 법대는 나와야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무역회사에서 영문학과 출신을 뽑는다는 모집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아마도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앞뒤가 될 것 없이 이력서를 냈다. 운이 좋았는지 면접까지 갈 수 있었다. 그때 눈만 마주쳐도 겁이 나던 벽안의 원어민(原語民)과 간단한 영어 말하기 듣기 테스트를 거쳐 사장실까지 갔다. 일인이 폐지하고 기업의 장은 절대자다. 두려움이자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다.



정명수 언론인

머리를 돌리고도 싶었다.

“영미시를 주로 했습니다” 이어 누구의 시(詩)를 많이 읽었느냐, 엘리엇의 황무지에 대해 얘기해보라는 등 상황이 매우 어렵게 꼬이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장님이 꽤 난해한 영미시(英美詩)의 화두에서 좀처럼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불과 반 학기쯤 배우다 만 나의 ‘황무지(荒蕪地)’ 실력은 거덜이 났고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

그때는 이름 석 자도 몰랐던 그 분은 알고 보니 영미 시에도 밝아 한국엘리트학회 회장까지 지낸 김광균 시인이었다. 그야말로 ‘임자 만난 것’이었다. 당시 원로 시인으로서 증권기업의

CEO를 겸한 분이 또 있었을까.

차단~한 등불이 하나 /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내 호를로 어딜 가라는 / 슬픈 신호나

그가 30년대에 쓴 불멸의 시작 와사등(瓦斯燈)이다. 이를테면 ‘가스등’이라는 이국적 정서에다가 나라를 빼앗긴 설움을 한밤에 비유하여 절망을 상징한 것이리라. 물질문명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쓸쓸한 도시적 삶의 고독과 비애와 우수를 읊었을 것이다.

희미한 눈발 / 이는 어느 잃어진 / 추억의 조각이기에 / 싸늘한 추회(追悔) / 이리 기쁘게 설레이노.

서글픈 옛 추억이 담긴 ‘설야(雪夜)’. 눈에 서린 나라 잃은 슬픔일 것이다. 시인이 가진 지어인 25년. 눈이 오는 밤, 시상(詩想)과 조국을 너무나 사랑한 옛 시인의 송고한 열을 새삼 되새겨 본다.

사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 이른바 민심 키워드다.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대북제재로 이어지는 안보 불안, 그 와중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평창동계올림픽, 서민들의 기본생계 불안정,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상상의 외로다.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한국제품의 중국 내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협상,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상향 조정 등으로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우려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교체가 여야가 바뀐 데 지나지 않는다고 국민이 느끼게 해선 안 된다. 권력의 오남용을 막을 통치체제 개편, 성장 엔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 한반도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

불황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늘지 않은 데 기인하고 있다.

당국과 경제계, 노동계 등 경제주체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상한 처방을 내놓아야겠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에 좀 더 과감히 나서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 정부 역할이 있어야 한다.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없도록 규제혁파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효과 상위 6대 과제 가운데는 장시간 근로개선만으로 신규 채용 확대가 14만~15만명에 달한다는 내용도 있다. 규제개혁과 고용 확대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당장 규제비용총량제부터 도입하기 바란다.

우려스러운 일은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중등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15~29세)의 작년 실업률은 9.9%로 2000년에

다시 짜야 할 정부 일자리정책

조정과 외교안보상의 주도권 확보 등에 대한 고뇌가 요청된다.

특히 경제 회생에 기반한 실업 해소는 화급한 현안이다. 한때 실업률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작년에 구직자들이 최악의 취업난을 겪은 것으로 집계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연초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는 265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1만7000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6년 29만9000명보다는 컸으나 2015년 33만7000명, 2014년 53만3000명에는 미달했다. 연간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으로 2000년 같은 기준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최고치에 달했다. 2016년 실업자는 101만2000명이었다.

이처럼 실업률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반 년 넘게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전체 실업자의 10명 중 1명꼴로 불어났고 월간 실업자 규모가 100만 명을 웃도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일하려는 사람은 늘지만 오랜 경제

현제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다. 작년에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는 가운데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5조원을 돌파한 게 뒷받침하고 있다. 작년 지급액은 전년보다 3384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에 취업촉진수당을 합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일본 기업들은 되살아나 20년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손이 모자라 구인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와는 정반대 풍경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책무가 크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민심의 바다’에 배를 띄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제대로 알 수 있다. “물은 배를 띄우지만 엮기도 한다”고 ‘순자’는 일갈했다.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민심이라는 물을 잘 대해야만 성년 파도를 마주하지 않고 순항한다는 경책이다. 지도자들이 직시하길 바란다.

세계로컬신문 THE SEGYELOCAL SHINMUN www.segyelocalnews.com
• 발행인 : 박 귀 중 • 인쇄인 : 정 희 택 • 편집인 : 여 운 상 • 편집국장 : 김 정 태
• 대표전화 : (02)2000-1686 • 제보 : (02)2000-1684 • Fax : (02)2000-1680
• 주소 : 03175 서울특별시 중로구 경희궁길 26 • 구독신청 및 광고 안내 : (02)2000-1686
• 구독료 : 월 10,000원 • 2016년 6월 2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 다50316
• Email : news@segyelocal.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의 동반자

세계로컬신문

(사)세계일보 조사위원회

세계일보 조사위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로컬신문은 사단법인 세계일보 조사위원회와
손 잡고 함께 나아갑니다

